

서문 및 정책 권고

나. 고든 플레이크/박노벽

지난 5년간 한국의 노무현정부 및 미국의 부시정부하에서 한미관계는 진전을 보이기도 하고 위협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실무적 수준에서는 주목할만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인 체결이라든지 기지 이전, 새로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같은 한미동맹간 난해한 문제에 있어서의 실질적 진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레바논 등지에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라든지 최근의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6자회담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정치적 수준에서는 태평양 양쪽의 일부 의원들과 여론주도층들이 동맹의 근본성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한미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양국 각자의 정책적 접근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라든지 동북아의 주요 역학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라든지 개인적, 정치적 차원에서 기존에 구축된 관계가 없었던 점 등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와 상호이해 부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이 시기동안의 업적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중요한 정치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였다고 인식되고 동맹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조치를 세밀히 추진함에 있어 불충분하였다고 인식된 점이 어떤 잣대로 보든 정치적 관계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동태성은 어느 정도는 한국에서의 정치 환경을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노무현대통령은 ‘반미’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미국에 대하여 회의적인 대중적 정서를 타고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어떤 성급한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진지한 걱정이 미군 훈련시 죽은 두 명의 한국 중학생의 비극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맞물려 한국의 여론을 자극하고 노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일부 그의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중발표문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이명박정부는 한국의 정치권이 한미관계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것같은 분위기속에서 키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북한의 핵실험, 고구려역사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에 의하여 제기된 한미동맹에 대한 뚜렷한 관심때문에 한국의 투표자들 대다수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한미관계 개선에 대하여 분명한 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명박대통령이 정치적 신세를 진 정치적 기반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작업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맨스필드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고 대북정책, 비핵화,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무역 및 투자, 그리고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다섯가지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접근법을 도출해 낼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섯명의 저명한 미국학자들에게 보고서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각 보고서 작성자들에게 본인이 다루는 주제를 한국에서의 새로운 정치현실이라는 맥락에서 조명하고, 더 나아가 동분야에서 한미양국간 조정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트머쓰 대학교의 데이비드 강은 “대북정책 공동접근법 도출: 경제 및 인도적 지원 이슈” 라는 통찰력있는 장

(제1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월프쌀 및 에너지부 휴직중이며 조지워싱턴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인 토비 달튼은 “조화로운 수렴? 성숙한 한미 간 핵 관계”라는 장(제2장)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주요 강박관념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확산분야에서의 좀 더 광범위한 협력까지 토론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리재단의 마이클 쉬퍼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전망”이라는 장(제3장)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동지역에서의 안보체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시행: 주요 도전 및 정책제안”이라는 장(제4장)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는 올해 한미 무역 및 경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유일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미동맹에 대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5장에서 미해병참모대학 브루스 벡톨은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적 측면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작성자들을 워싱턴내 당해 이슈 및 분야 전문가들과 연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2008년 1월중에 다섯개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동 워크숍에서 보고서작성자들은 연구내용을 발표한 이후 참석자들로부터 의견들을 청취하였고 이를 이 책에 포함된 최종보고서에 적절히 구체화시켰습니다. 동 워크숍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전문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가 현재 워싱턴의 정책전문가들의 생각을 잘 대변하여 대통령직인수기간동안 한미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동 워크숍의 토론내용을 발췌하여 각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권고사항 몇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동 권고사항들은 아래에서 본서의 각 장에 등장하는 순서에 맞추어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정 권고사항은 우선순위에 맞추어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들은 뒤에 오는 각 장에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각 보고서작성자들의 개별견해라기보다는 워크숍 참석자들의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책 권고

대북정책 공동접근법 도출: 경제 및 인도적 지원 이슈

1. 한국과 미국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협상에서의 지렛대 (leverage)를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개입정책의제를 확대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조화로운 접근법은 어떤 방식이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 관련 대화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2. 한국은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할 때 국제기준과 규칙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한국은 국제연합 결의안 등과 같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비난하기 위한 미국과 여타 민주국가들의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3.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위기상황(contingencies)을 넘어선 북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작성을 위하여 고위급간 조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4.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과거 및 향후 잠재적 원조공여국들은 세계식량기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대화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동 대화에서는 국제적 분배 및 모니터링 기준에 기초하여 대북원조관련 조화로운 접근법 도출을 위하여 집중 논의하여야 합니다.

비핵화관련 공동접근법 도출

1. 한국, 미국, 일본은 주로 6자회담에 초점을 맞춘, 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은 삼자간 효과적 조정체계를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 부시대통령 및 후쿠다 총리간 삼자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첫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자간 조

- 정 및 협력체계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관리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수많은 상호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2. 6자회담에서의 담보상태와 영변핵시설을 넘어선 비핵화과정의 신속한 진전에 대하여 기대가 낮음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 또는 그 진전의 부족을 인도 및 경제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 및 정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3.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불능화 및 해체 과정에 대한 공동의 척도(metrics)와 기준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은 안전과 투명성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4. 한국과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포함한 한국의 민수용 원자력발전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과 포괄적인 핵관련대화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5.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선 맥락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지지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은 확장된 범지구적 역할의 일환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평화 및 안보체제관련 공동접근법 도출

1. 그 형태와 시기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과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가 한미간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양국정부는 평화가 어떤 모습을 띠 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한 과정은 한국에서 제안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2.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미래지향적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핵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과 미국은 대북협상진행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평화선언을 협상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4. 미국은 동북아평화 및 안보체제라는 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하여 좀 더 고위급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위관료가 어떠한 형태든지 미래지향적 성명을 발표할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역 및 경제관련 공동접근법 도출

1.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올해 비준되어 시행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게 열려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한국에서의 총선 및 올해가 미국의 대통령선거연도라는 한미 양국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올해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한미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향후 예정된 이명박대통령의 첫번째 워싱턴 방문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토론구조를 논쟁의 여지가 많고 현재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경제분야에서 옮겨 워싱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가안보이슈로 재구성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미 양국이 소고기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하고, 바라건대 한국 국회에 의하여 비준된 자유무역협정을 손에 들고 온다면 이명박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어느 정도 자신있게 요청하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부시정부가 미국 의회를 압박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국과 함께 선 동맹국과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비준토록 할 것입니다.
3.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를 좀 더 제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규모의 국가나 경제권과 비교할 때, 한국은 미국과 타국의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제도화된 장치, 구조, 그리고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 자유무역협정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한미 양국내 기업간 협력체뿐만 아니라 정책공동체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동의 경제적 관심사에 있어 다자간 협력과 조정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유지관련 공동접근법 도출

1. 부시행정부의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감안할 때, 한미 동맹의 공식적인 “비전”을 만드는 일에 한국측이 주저함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명박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공동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의 개시를 알리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동 비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왜 동맹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동 과정이 미국의 신행정부 초기에 마무리되어 양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긍정적인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6자회담 위에 그리고 이를 넘어서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은 안보이슈와 관련한 삼자간 의사소통, 협력 및 조정을 재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재시동하여야 합니다.
3. 한미양국은 동맹의 유지와 관련하여 이미 합의된 이슈들의 집행을 꼼꼼히 관찰해 나가고 안보환경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기 권고사항이 동맹의 유지에 있어 의사소통이나 조정 등 상대적으로 분명한 단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지난 5년간 특히 북한, 중국, 일본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동맹간 협의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토론과정과 본서에 포함된 다섯개의 장에 걸쳐서 서울에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현실”이 있으며, 동 현실이

한미양국 관계에 좋은 징조라는 일반적 낙관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서가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향후 이명박정부가 한국에서 출범함에 따라 전개될 수많은 중요한 토론에 기여하고 한미양국간 이해를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상기의 다섯가지 이슈에서 좀 더 밀착되고 조정을 거친 접근법을 도출함에 있어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진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새 없이 노력한 맨스필드재단 김완기 객원 연구원과 본서가 적절한 시기에 결실을 맺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메리-제인 애트워터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대북정책 공동접근법 도출: 경제 및 인도적 지원 이슈

데이비드 강

이 당선인은 **외교정책 맥락**에서 상대적 역내 안정, 대북 관계 진전, 한미관계 개선, 일중 관계 호전, 신고기한 미준수에 불구하고 북미간 합의가 능성 상존, 그리고 중도 성향 국민의 지지 등 여러측면에서 유리한 여건하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내 여론**은 대북협력정책을 지지하지만 좀 더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력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론이 대북협력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또한 좀 더 강경한 대북접근법에 대하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력정책, 핵문제 등 안보 문제 최우선 해결, 그리고 경제적,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관심 집중 등으로서, 북한의 핵프로그램포기 및 시장개방을 협력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하는 동 정책은 한미간 정책 우선순위를 좀 더 조화롭게 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조율을 용이하게 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대선 일정상 2009년 신행정부 출범시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남북 경협과 미국의 제재조치간 관계를 살펴보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가 실현되더라도 대북 제재 규정이 최소 42개나 상존해 있어 미국은 경

협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이 없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시 정치적 압력을 거의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 등 다양한 범주별로 한미간에 우선순위가 다른 측면이 있으며, 크게 ‘외부 압력방식(curse the darkness)’ 과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 유도를 추진하는 ‘내부 변화유도방식(light a candle)’ 이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해결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접촉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정책이 같을 필요는 없으며, 정책의 상이함이 양국간 협력의 부족을 의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책조율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중점을 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세계식량기구와 함께 한-미-일 삼자간 대화를 개최하고, 둘째, 양자간 조율을 통한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기 위하여 대북관련의제 확대에 대한 한미간 대화를 시작하며, 셋째, 인권 관련 국제적 기준에 중점을 두고, 넷째, 한국이 북핵문제, 개성공단, 6자회담 등을 포괄하는 대북협력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을 평가기준(benchmark)에 연계하여야 하며, 다섯째, 군사적 위기상황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자연재해 같은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대비책 수립을 위한 한미간 대화를 시작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조화로운 수렴? 성숙한 한미간 핵 관계

존 월프셀, 토비 달튼

신 정부의 북한정책은 이 당선인이 반복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점, 실용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정치 중심을 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세가지 특징을 보일 것입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북미관계는 개입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동 정책은 여타당사국의 지원아래 북한의 행동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 북한의 신고기한 미준수의 진의에 대하여 아직까지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측은 신고의 시기보다 신고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자 회담과 관련하여 한국 신정부의 정책이 미칠 영향과 한국 신정부가 추구할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아야 하지만 한국의 신정부는 미국과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핵포기는 필수사항이며, 진정한 협조만이 진정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설해체, 검증, 핵물질 처리 및 제거, 환경 복구 등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강조될 것입니다. 한국이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미국 관리들이 동 이슈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 한미간 원자력분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국제비확산체제와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원자력에너지협력체제(GNEP) 참여가 한미간 협력을 위한 하나의 장을 제공할 것이지만 2014년이 기한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의시 동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제안으로 첫째, 한미일 삼자간 조정그룹회의를 재개하여야 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원조에 있어 미국이 좀 더 부담을 공유하여야 하며, 셋째, 북핵해체에 있어 한국의 자원을 좀 더 활용하고, 넷째, 한미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정책리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잔여문제로 첫째, 협상의 추진력과 관련하여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으나 차기 행정부가 동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둘째, 북한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북한이 경수로(LWR) 제공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이슈에 대한 입장이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이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어느부처 중심으로 할 것인지가 공통의 입장을 강조하는 한미 외교당국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며, 넷째, 한국내 반미주의 성향이 향후 정책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 전망하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전망

마이를 쉬퍼

북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틀을 항구적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그 목적, 기능 등에 대하여는 전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장에서는 지역안보체제의 필요성, 안보체제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관계, 한미간 입장차이 분야, 그리고 체제의 골격(design)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동 체제가 향후 효과적인 제재조치의 유지, 핵물질이나 기술이전 방지, 안보보장의 암시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전협정하 불안정한 한반도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고, 역내국가간 전략적 신뢰 부족과 새로운 역학관계로 인한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보체제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의 모범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평화체제의 성공은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하며 이런 이유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체제와 안보체제의 관계에서도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에서는 북핵해결이 양체제 발전의 선결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보체제 관련 한미간 입장차이는 북한과 관련된 위협인식 차이, 대북정책의 차이,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관심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저변에는 동북아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정책과 지역외교에 있어 미국의 태도

조정과 이 당선인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실용적 외교노선 추진 공표로 양국간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지역안보체제와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여 공동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체제의 골격과 관련하여서는 (1) 6자회담과정에 기반하여 안보체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2) 첫단계부터 제도화할 것인지 임시체제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여부, (3) 군축(CSBM) 등 협력 의제의 선정, (4) 다자체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국가, (5) 북한 등 회원국범위 한정 여부, (6)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대화협의체(Forum)를 할 것인지 유럽협조체계(Concert of Europe)와 같이 정보공유, 협력 규범 창출 등에 의하여 당사국간 협력관계를 규율하는 협조체(Concert)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동체제의 형태, 목표공유, 입장차 극복, 공동비전 개발을 위한 한미간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시행: 주요 도전 및 정책제안

제프리 쇼트

한 미자유무역협정이 작년에 타결되었지만 아직 그 시행은 양국정부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한국측 비준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동 협정에서 쌀이 제외되고, 동 협정으로 타격을 받는 농업,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협정 체결 이후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비준은 크게 (1) 노무현정부 임기만료전 비준, (2) 4월초 총선 이후 6월 18대 국회 출범 이전, (3) 18대 국회에서의 비준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방안으로 추진되거나 소고기수입문제를 우선 해결 후 미의회의 비준과 동시에 비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방안은 한국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이 미의회보다 먼저 비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의회의 비준을 촉진할 것입니다.

미국측 사정을 살펴보면 미의회가 한미 FTA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 미해결, 예비선거 등 미국 대선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변동성, 협정상 자동차관련규정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전면 허용은 미 의회의 본격적인 심의과정 개시에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이 당선인의 언급처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위험통제국가 판정에 따라 빼있는 미국산 소고기수입도 금지

할 이유가 없고, 한국 소고기 생산농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합니다. 동 방안은 소고기 관련 식품안전을 제고하고 한국에서의 정치적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미 대선 예비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주요 주자들 모두가 미 자동차업계의 불만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 자동차 문제**는 사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저하 문제와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 및 연금 비용 같은 미국 경제 내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 자동차업계와 노조, 행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내 협정비준이 가능하지만 그 기회의 창이 매우 좁게 열려 있는 바, 양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협정 비준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한미간 조속한 정상회담의 개최는 상호 건설적 대화를 위한 틀을 세우고 협정 시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미동맹에 대한 기회와 도전

브루스 벡틀

한 국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바, 그 영향을 한국군 발전(미사일방어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시작전권, 동맹관계 개선(기지이전, 분담율), 외교정책(북방한계선)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군 발전 측면에서 북한군의 위협, 한미간 상호작전 운용성(interoperability) 등 두 가지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을 살펴보면 북한은 1990년대 이래 미사일능력 강화, 휴전선인근 장사정포 배치, 특수부대(8만 내지 10만명) 양성 등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PAC-3 패트리엇 체제, SM-3 체제 도입 및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C4I) 마련, 수송능력 보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의견처럼 한국군의 능력 및 북한군 위협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맹관계 개선 측면에서 인건비제외주둔비(NPSC) 분담을 확대 등 한국측 분담을 일본처럼 늘려야 하며 기지이전의 원만한 진행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외교정책과 관련하여서 집권초기 정상외교와 정부 조직개편이 중요하며, 북한 인권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입장의 변화는 동맹국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며, 한미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은 기술적 차원 협력(전투, 통신, 정보체계), 정보적 차원 협력(연합 교범, 훈련, 교육), 이념적 차원(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가치 공유) 협력과 재정적 지원약속(국방예산배분)이라는 4가지 협력의 틀을 통해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국군의 임무수행 태세와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